

여야 대권주자·대표들 개헌 반응



野 잠룡들 “우병우·최순실 덮으려는 건가”

발언 의도 경계… “임기말 대통령은 개헌 논의서 빠져야”

김무성 특위 구성 제안… “내년 4월12일 국민투표 적합”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내년 대선을 노리는 잠룡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며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세요. 피탄 난 경제, 민생부터 쟁겨주세요.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우선 아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박근혜 개헌,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박근혜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국민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해야 한다”며 “현재 약당 체제에 유리한 선거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반해 약당 다선의원들이 대책마련을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는 “임기말 대통령은 헌법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서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쥐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

는다. 그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손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에 나타났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며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새 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내년 4월 12일 보궐 선거가 국민투표에 가장 적합한 날짜”라고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국면을 넘기기 위한 차원의 개헌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순실, 우병우 의혹 등에 대해 단호히 처리하면 국면전환용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개정안 발의~국민투표 110일 소요…내년 1월까지 발의 돼야

개헌 절차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따라 개헌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단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 일이 소요된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내년 12월 20일에 제19대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 일이 소요된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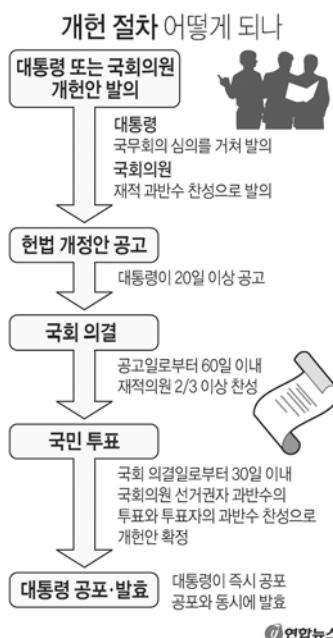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의결

국회 의결

국민 투표

대통령 공포·발효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개헌의 막그림을 놓고는 여파 사이에 생각이 달라 향후 개헌논의가 그리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개헌론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견해들이 크게 엇갈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이 일치하지만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아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회내각제 등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방식·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축소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운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내년 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짧아지게 된다. 이를 피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짧아지게 된다.

정치권-청와대 주도권 싸움 예고

어느 당도 단독처리 불가

가엇갈려 개헌특위 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그 구성상 어느 당도 개헌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분출될 때마다 거론돼온 ‘논의 방식’이지만 1987 개헌 이후에는 실제로 구성된 적은 없다. 그동안 숱한 개헌 제안들이 쏟아졌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당,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에

가엇갈려 개헌특위 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그 구성상 어느 당도 개헌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야당과 여당 내 비주류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길잡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옛살돈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